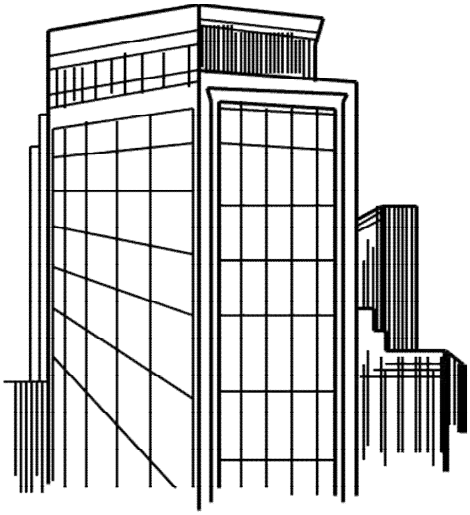
경영정보 브리핑

2021. 10. 1. ~ 2021.10.29



정책이슈

- 이주열 "다음달 금통위서 인상 고려", 금년 내 추가인상 점쳐져 P. 1
- "공사비 빼고 안 오르는 게 없네", 근심 깊은 건설업계 P. 2
- 역대 최대 SOC 예산'에도 미지근한 반응 나오는 건설업계 P. 3
- 한국수력원자력 4년 뒤 신재생발전이 원자력발전 '투자비중 역전' P. 4

조합 · 유관기관 등 동향

-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선임 난항 P. 5
- 전문건설공제조합 제251차 운영위 개최 P. 6
- 차기정부 공공기관 빚 600兆, 에너지 전환에 한전 `빨간불` P. 7
- 대선 앞둔 정치권 압박에 힘 받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P. 8

금 융

- 월간 경제지표 P. 9
- IMF, 세계 경제성장률 하향, 한국은 4.3% 유지 P. 10
-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장기화 우려 P. 10
- 유류세 20% 인하 및 소비쿠폰 사업 진행 P. 11
- 강화되는 DSR 규제 P. 11

전기공사공제조합 | 기획조정실

고경호 부장 02-6936-9332

경 제 · 정 책 이 슈

▣ 이주열 "다음달 금통위서 인상 고려", 금년 내 추가인상 점쳐져

1. 10월 12일 금융통화위원회 금리동결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이하 이 총재)는 12일 "경기 흐름이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다음번 회의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 한국은행은 12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를 열고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동결. 임지원·서영경 금통위원은 0.25%포인트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을 제시. 금통위는 지난 8월 2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연 0.50%에서 0.75%로 인상한 바 있음.

- 이 총재는 "8월에 금리를 인상하면서 앞으로 경기 개선 정도에 맞춰서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나가겠다 말했다"며 "금리를 동결했지만 대내외 여건이 국내 경제,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경기 회복 흐름이 벗어나는 건 아닌지에 대해 짚어볼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

2. 금년 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점쳐져

- 최근 물가 상승 관련해서도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시사. 최근 유가 상승으로 국내 소비자물가의 오름 폭이 확대됐다는 점 때문. 이 총재는 "유가는 배럴당 80달러 수준으로 높아졌는데,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며 "유가는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에 봤던 수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상.

- 이전과는 달리 연속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점도 내비침. 그는 "연속으로 금리인상을 하고 안 하고는 과거 방향 문제가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이 중요한 것"이라며 "금통위원 2명이 소수의견을 낸 것은 지금이 인상하는 데 적기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 이어 "다음 달 상황을 지켜보고 추가 인상 여부를 지켜볼 것"이라면서 "경제 상황이 금통위가 보고 있는 것과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추가 인상을 고려하는 게 좋겠다는 게 다수 위원들의 견해"라고 덧붙임.
(전기신문, 2021. 10. 12.(화))

▣ "공사비 빼고 안오르는 게 없네", 근심 깊은 건설업계

1. 철근 유통가격 가파르게 상승

- 현재 시중 철근 유통가격(SD400·10㎜ 기준)은 t당 103만~104만원. 140만원까지 치솟았던 5~6월 철근 수급대란 시점에 비하면 싸지만, 연초 대비 40% 오른 가격. 특히 작년에 공사를 수주했던 현장의 경우는 2배 가까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음.

- 중견건설사 B사 임원은 "작년 2월 오피스텔 사업을 수주했을 당시만 해도 철근 거래가격이 58만 ~ 60만원 사이였고, 해당 가격을 바탕으로 공사비가 책정됐는데 지금은 100만원을 넘어선다"며, "자재가격 인상 폭이 너무 커 손실이 누적되는 상황"이라고 토로.

2. 공공공사 현장도 자재값 인상 압박

- 가격이 급등한 자재에 대해 '단품 슬라이딩' 제도가 있긴 하지만, 이를 적용하는 현장은 드문 현실. 해당 자재값 인상에 대한 보전은 받을 수 있겠지만, 나머지 자재 인상에 대해선 속수무책인 까닭. C사 관계자는 "예컨대 철근을 단품 슬라이딩으로 요청하면 추후 총액 에스컬레이션(E/S) 심사를 받을 때 철근 품목은 제외되어서 총액 심사에 불리해질 수 있다"라며, "결국 대부분 건설사들이 공사비 총액 E/S를 기다리다 보니, 당장 하도급사들의 불만이 상당하다. 제도가 좀 더 유연해져야 한다."고 지적.

철근 외 자재 가격인상현황

구 분	건설용 후판	앵글 (두께 50mm 기준)	100A 배관재	목재PB (파티클보드)	석고보드	레미콘
이 전	75만 원/톤	55~58만/톤	140만/톤	8천원/1매	-	-
현 재	125만 원/톤	112만/톤	203만/톤	1만 3천원/1매	20% 상승	2~5% 상승

- 여기에 최근 금리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돼 현장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난 상황. 그야말로 공사비(계약 기준) 빼고 공사 관련 모든 비용이 오르고 있는 셈. 이와 관련, 중견건설사 D사 대표는 "이미 자재가격의 이상 급등으로 건설사 대부분이 각 현장에서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 아직 준공 전이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겠지만, 준공 후 적자 현장이 하나둘씩 나오게 되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건설사는 그룹 대형사를 빼놓고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좀더 경각심을 가지고 자재가격 안정과 계약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 (e대한경제, 10. 25. (월))

▣ 역대 최대 SOC 예산'에도 미지근한 반응 나오는 건설업계

1. 2022년 역대 최대수준 SOC 예산안 편성

-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중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으로는 올해보다 1조 원 늘어난 27조 5,000억 원이 배정됨. 정부는 **'역대 최대 수준'의 SOC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자평.

- 우선 정부는 SOC 예산의 방점을 고도화·첨단화에 두고 집중 홍보 중. 실제로 SOC 예산 증액분 1조 원 중 7,000억 원이 SOC 고도화·첨단화에 집중됨. 구체적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지방 광역도로·철도를 본격 추진하고,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에 착수하는 국가교통망 확충 예산이 3,000억 원 가량 증가. 이 밖에도 ▲도심 항공교통 인프라 구축 ▲철도 스마트 관리체계 ▲스마트 시티 ▲스마트 물류 등이 내년도 주요 예산으로 꼽힘.

2. 건설업계, 예산안에 대해 아쉬운 기색 표현

- 건설업계에서는 SOC 예산의 총액이 30조 원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됨. 대한건설협회(이하 건협)는 지난 28일 국회에 "SOC 예산을 30조 원 이상 편성 해 달라"는 건의문을 보낸바 있음. 건협은 건의문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2.5% 이상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관을 통틀어 53조 원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SOC 투자를 통해 일자리 확보와 소득 회복이 될 것"이라고 주장. 건협은 지난해에도 'SOC 예산 30조 원 편성'을 주장한 바 있음.

- 예산의 구성 측면에서도 SOC 예산 상당수가 건설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 역시 나오는 상황. 한 건설 유관협회 관계자는 "겉보기에는 역대 최대치라는데,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 스마트 사업 중심의 정보통신(IT) 투자 사업이 상당수"라며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당장의 마중물 효과를 기대하기엔 다소 아쉽다."고 언급. 그러면서 "특히 부동산 대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규모 공공주택 건설예산이라도 더 편성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임.

- 반면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SOC 예산은 사회의 인프라를 통해 외부효과를 창출할 수 있어 예산 배정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 분야"라며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SOC 예산 총량은 기본은 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조선비즈, 10. 1.(금))

▣ 한국수력원자력 4년 뒤 신재생발전이 원자력발전 '투자비중 역전'

1. 2025년, 한국수력원자력 신재생발전 설비 투자 비중 원자력발전 투자 비중 초과

- 한국의 원자력발전 기술을 이끌어온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밀려 사실상 원전을 포기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기업으로 바꾸는 모양새.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한수원이 수익성 낮은 신재생 확대에 본격 나서면서 전기료 인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

- 10일 한수원이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신재생 투자계획 및 중장기 재무관리 전망'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의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투자 비중이 점차 늘어나 2025년 7,07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올해 1조 5,000억 원 규모인 원전 투자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5년 4,092억 원으로 감소.
원자력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회사 경영계획에 반영된 것"이라며 "한수원이 원전을 포기했다는 의미"라고 설명.

2. 향후 10년간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13조 투자예정

- 한수원의 향후 10년에 걸친 에너지 개발 계획은 다음과 같음.

구 분	태양광 설비	풍력설비	태양광, 풍력설비 등 총 신재생 설비
현 행	58MW	80MW	248MW
2034년	6062MW	4226MW	12,141MW

2030년까지 투자비용	
태양광 설비	풍력 설비
4조 6,711억 원	7조 1,734억 원
태양광, 풍력설비 등 포함 총 13조 1055억 원 투자예정	

- 한수원이 비용 대비 효율이 낮은 신재생 투자를 늘리면서 회사의 재무구조는 점차 악화될 전망. 한수원의 중장기 재무계획에 따르면 작년 기준 36조 784억 원인 한수원 부채는 2024년 39조 678억 원까지 치솟게됨.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137.6%에서 145.3%까지 증가.

- 전문가들은 한수원 등 발전 공기업의 재무구조 악화가 전기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음. 발전사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신재생을 무리하게 늘리면, 적자가 불어나 전기료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
(한국경제, 10. 10.(일))

조합 · 유관기관 등 동향

▣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선임 난항

□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선임이 난항을 겪는 중. 10월 말로 현 이사장 임기가 끝나지만 아직 후임후보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노동조합에서는 현행 선임제도가 불합리하다며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됨.

□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현 최영묵 이사장 임기만료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지만 아직 마땅한 후임후보를 정하지 못하고 있음. 현재 후임 이사장 선임을 위해 27일 운영위원회, 11월 16일 총회를 예정해 놓고 있으나 일정대로 추진될 지는 미지수.

□ 조합 관계자는 "한때 거론되던 후보가 있었는데, 지금은 잠잠한 상태"라며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언급. 이번 이사장 선출을 앞두고 조합원 이사장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그동안 이사장은 국토교통부 출신 인사나 정치권 후원을 받는 외부인사가 맡아왔음. 노조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이사장 선임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이사장추천위원회를 도입하라"고 촉구.

□ 노조는 이사장 선임제도 및 방법에 대한 공신력과 정당성을 담보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선임 때마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고 비판. 현 조합정관에 '이사장은 운영위원회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선임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인 절차·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

□ 노조는 이사장추천위원회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교직원공제회 등 다른 유사기관들이 이미 실행해 검증받은 제도라고 설명. 더불어 이들은 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에 직원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1인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 (내일신문, 2021. 10. 26.(화))

▣ 전문건설공제조합 제251차 운영위 개최

□ 전문건설공제조합이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제251차 운영위원회(위원장 송한용, 이하 운영위)를 개최. 이 날 운영위는 제72회 임시총회 소집안을 의결. 조합은 11월 2일 14시에 전문건설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총회를 개최하며, △2022사업연도 예산안 △정관 변경안 △이사장 선임안 △상임감사 선임안 △운영위원 선출안이 부의될 예정.

□ 운영위는 4개 지점 축소 및 스마트심사팀·신규사업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 이에 따라 내년 2월 1일자로 부산북·서대구·동광주·부천지점이 폐쇄됨.

□ 조합은 4개 지점을 축소하는 한편, 본사에 스마트심사팀을 신설하여 이번에 통합되는 지점의 비대면 업무를 전담 처리하도록 할 방침. 현재 90% 이상의 보증·융자·공제 업무가 인터넷 업무시스템을 통해 조합원에 제공되고 있는만큼, 조합은 장기적으로 스마트심사팀의 업무처리 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

□ 조합원의 조합 금융상품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영업지원팀에 홍보 마케팅 기능을 더한 영업홍보팀으로의 확대 개편도 이루어짐. 조합은 마케팅 역량 강화를 통해 현재 75%인 조합 이용률을 85%까지 10%p 높여나가는데 집중할 방침.
영업홍보팀은 신규·미이용·우량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영업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타겟 할인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영업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설 계획.

□ 마지막으로 관리채권 상각 승인안 원안을 의결하고 상각채권심사위원 선임안에 대해서는 선임권을 운영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의결. 상각채권심사위원회는 조합원 5인, 국토교통부 직원 1인, 세무·법률 자문위원 2인, 조합 임원 3인 등 총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조합원 위원 5인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조합은 조속한 시일 내에 상각채권심사위원을 선임 절차를 완료할 예정. (대한전문건설신문, 10. 15.(금))

▣ 차기정부 공공기관 빚 600兆, 에너지 전환에 한전 `빨간불`

□ 공공기관 부채가 차츰 불어나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 내년도 이후부터는 6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공공기관의 부채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옴.

□ 24일 이데일리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내년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40개 중장기 재무관리대상 공공기관 부채규모는 585조 3,000억 원으로 전망됨. 이는 올해 549조 6,000억 원보다 **89조 3,000억 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

□ 기관별로 보면 LH의 부채규모는 2021년 141조 2,000억 원에서 차기 정부가 시작되는 2022년 161조 6,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 에너지 관련 공기업인 한전의 부채규모는 올해 66조 7,000억 원에서 내년에는 71조 2,000억 원으로 늘어난 뒤 2025년엔 81조 1,000억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됨. 부채비율도 올해 135.4%에서 2025년 159.9%로, **24.5%포인트 높아질 전망**.

□ 앞서 지난 2018년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 부채비율이 2020년 160%에서 2022년 156%까지 내려가는 등 감소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 그러나 실제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161.1%였으며, 올해 발표한 재정 전망에서 정부는 **2022년에는 부채비율이 172.5%까지 지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

2021 ~ 2025 부채비율 전망

(단위: 조원)

구 분	20년(실적)	2021년(A)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B)	증감(B-A)
부채비율	161.1%	167.5%	172.5%	170.6%	167.7%	162.6%	**4.9%**
부채규모	512.1	549.6	585.3	606.9	623.4	638.9	**89.3**
자본규모	317.9	328.2	339.4	355.8	371.7	392.9	**64.7**

※ 출처 : '40대 중장기 재무관리대상 공공기관 부채', 기획재정부

□ 기재부는 2022년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부채비율 관련해 2018년 당시에는 부채규모 203조 1,000억 원, 부채비율 235%를 전망. 하지만 올해 발표에서는 부채규모가 210조 3,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이는 부채비율 300%가 넘는 수준. 금융부문 부채비율도 2018년 93%에서 2022년 70%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기존 전망과 달리, 올해 발표에서는 내년에도 80%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판단. 결국 정부의 빗나간 재정 전망과 더 악화하는 공공기관 부채로 차기 정부가 떠안아야 할 빚이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이데일리, 10. 25.(월))

▣ 대선 앞둔 정치권 압박에 힘 받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NDC) 목표 달성과 2050 탄소중립이 핵심 정책과제로 떠오르면서 차기 대선주자 사이들도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신설 내용을 담은 공약을 속속 발표하는 중.

□ 이런 와중에 산업통상자원부도 최근 조직 체계 개편을 연구하는 용역을 발주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산업부는 매년 진행하는 용역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정권 말 진행한 용역 결과가 **다음 정부의 조직개편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정책을 책임질 새로운 부처 탄생을 앞두고 사전 정지 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것.

□ 산업부는 용역의 이유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변화하는 통상환경 대응, 에너지 전환정책 추진** 등 정책기능 확대에 대비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체계와 조직 개편방향을 세우기 위해서` 라고 언급. 이번 연구용역은 일반 연구용역이 아니라 긴급 용역으로 진행.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용역 작업을 진행해 그 결과를 토대로 조직개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도로 추정되는 상황.

산업통상자원부 조직진단 연구용역 과제

■ 국내·외 급변하는 정책 환경 분석
■ 변화하는 환경 대비 산업·통상 에너지 분야 역할모색
■ 산업·에너지·통상 분야별 정책여건·조직 특성 도출
■ 재배치·기능보강 등 실·정책과장 중심 조직진단 TF 구성
■ 산업·에너지·통상 분야별 정책 추진체계 및 조직개편 방안 도출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전문가들은 주요 대선 후보 간 산업·에너지·통상정책 등에 대한 공약을 마련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편안을 마련해 대응방안 마련과 정책안 제시 등을 위한 것이 아니겠냐고 분석. 거대 부처로서 대선 때마다 정부 조직개편 대상으로 거론되어 온 만큼 대응논리를 만들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 산업부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기후에너지부 신설. 산업부에서 에너지, 환경부에서 기후변화 업무를 떼어 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의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심상정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음.

□ **전문가들은 산업과 에너지업무를 한 부처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 익명을 요구한 국책 에너지연구기관의 한 연구위원은 "산업과 에너지 정책을 한 부처에서 모두 다루면 **에너지가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기후환경 문제가 에너지정책에 중요한 이슈를 부상하면서 과거 동력자원부 시절처럼 기후에너지부로 가는 게 바람직하고 그게 어렵다면 전력청으로 분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이라고 언급. (이데일리, 10. 20.(수))

금 융

▣ 월간 경제지표

기간 : 2021. 10. 1. ~ 2021. 10. 28.

구 분	변 동 폭	10. 1 기준가	10. 28 기준가
KOSPI	▼ 9.63	3019.18	3009.55
KOSDAQ	▲ 16.93	983.20	1000.13
S&P500	▲ 239.38	4357.04	4596.42
CD(91일, %)	▲ 0.06	1.04	1.10
국고채(3년,%)	▲ 0.384	1.633	2.017
회사채(3년, AA-, %)	▲ 0.4	2.087	2.487
국고채(10년, %)	▲ 0.139	2.258	2.397
미국고채(10년, %)	▲ 0.113	1.465	1.578

□ 증시

- [국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등 대외적 악재로 월초 하락하였으나, 3분기 기업 호실적과 위드코로나 기대 속 외인 및 기관의 매수세로 재상승하였음.

- [미국] 주요기업들의 양호한 실적 발표가 지속되며 상승을 이어가고 있으며 테슬라의 강세에 따른 기술주들의 투자심리가 강화되고 있음. 다우지수와 S&P500은 신고가를 지속 경신하였음

□ 금리

- [국내] 연초부터 이어진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유가 행진, 테이퍼링 가시화로 인한 달러화 강세에 따라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타났음. 정부는 국채 발행물량을 조절하겠다고 밝힘.

-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시점이 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와 높은 인플레이션의 장기화 우려에 따라 금리의 상승세이나 경제성장의 불확실성과 저가매수세 유입이 상승세를 약화시키고 있음.

▣ IMF, 세계 경제성장률 하향, 한국은 4.3% 유지

□ IMF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5.9%가 될 것으로 전망함. 지난 7월 전망치인 6%에서 0.1%p하락한 수치임. 2분기 대규모 재고 감소와 이로 인한 공급망 교란, 소비 둔화를 반영하였다고 밝혔으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명확해질 때까지 각 나라는 돈줄을 조이는 통화 긴축에 신중하여야 한다고 권고함.
(MBC 10. 13.(수), KBS 10. 13.(수))

□ 미국은 1%p 낮아진 6%, 독일은 3.2% 일본은 2.4%로 0.4%p 하향 조정되어 선진국들의 회복세 둔화를 보여주었음. 우리나라는 기존과 동일한 4.3%로 유지되었으며 백신 접종률 확대, 수출의 견조한 증가세, 추경예산 집행 효과 등에 따른 결과라고 정부는 평가하였음. (매일경제 10. 12.(화))

▣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장기화 우려

□ 미국 9월 소비자 물가가 5.4% 상승하면서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예상보다 장기화될 것이라고 예상. 물류대란, 원자재 부족 사태, 임금 급등이 전방위적으로 맞물려 생산 비용을 끌어 올리고, 소비자에게 전가 되고 있음.
(블룸버그통신 10. 12.(화), 조선비즈 10. 13.(수))

□ **[물류대란]**
수입품 소비 수요는 증가하나, 해운·하역·운송 관련 근로자들은 아직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현장에 복귀하지 않아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있음. 글로벌 해운운임 지표인 상하이 컨테이너운임지수는 지난해에 비해 3배 넘게 상승함. (조선일보 10. 15. (금))

□ **[원자재 부족]**
경제회복 기대에 따른 수요는 증대되는 반면, 탄소중립정책 및 산유국들의 증산 억제 등으로 인한 공급 부족으로 원자재 및 유가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음.
유가는 배럴당 80달러대로 상승하면서 7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하였음.
(매일경제 10. 15.(금), 조선비즈 10. 13.(수))

□ **[임금 급등]**
미국에서 일자리는 증가하고 있으나, 팬데믹을 계기로 대규모 조기 은퇴 발생, 정부보조금 지급 지속 등으로 자발적 휴직 증가 등으로 구인난이 심해지고 있음.
임금 상승세는 최근 3개월 연속 4% 넘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음.
(조선일보 10. 15.(금), 파이낸셜뉴스 10. 10.(일))

▣ 유류세 20% 인하 및 소비쿠폰 사업 진행

□ 정부는 물가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6개월 동안 유류세를 20% 완화하기로 발표함. 유류세 인하는 2000년 이후 네 번째로 인하폭이 가장 크며, 휘발유 가격은 리터 당 1,600원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기대됨.

□ 예산 5,500억을 투입하여 외식, 숙박, 여행 등 9개 쿠폰 모두 오프라인 사용을 허가하기로 하였음. 위드코로나에 맞춰 민간 소비력 제고를 통한 경기 뒷받침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힘. (조선비즈 10. 26.(화))

▣ 강화되는 DSR 규제

□ 정부는 내년 7월 및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DSR 규제 2단계와 3단계를 각각 내년 1월과 7월로 앞당겨 조기 시행하기로 함. DSR이란 연소득 대비 한 해에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의 비율을 의미함.

□ 내년 1월부터 2억 원이 넘는 모든 은행 대출은 DSR을 40%, 보험은 50%로 맞추어야 하며, 7월부터는 1억 원 초과의 대출에 대해서 적용이 됨. 제2금융권 DSR 기준도 현행 60%에서 50%로 낮추고, 카드론에도 DSR을 적용하기로 함. 반면 서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하여 올해 4분기에 취급된 전세대출은 대출 총량 한도에서 제외하고 내년 적용대상에도 제외됨.

□ 정부는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율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면서 금융불균형 누적을 진정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힘. 일부 전문가들은 규제 강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주택 수요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는 방안으로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지적함. (MBC 10. 26.(화), 조선비즈 10. 26.(화))